

1인당 6억... 'N% 성과급' 위험한 도미노

(삼성 메모리 부문)

AI 붐 호황 맞은 '삼성전자' 직원들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의 7.7% 받는 셈 전세계 유례 찾기 힘든 영업익 연동 다른 기업 성과급에 영향 가능성 "합리적 보상체계 논의 필요" 지적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약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한국 산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영업익 연동 성과급'을 도입해 재계에 '보상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화두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례 없는 인공

지능(AI) 발 호황 속에서 합리적인 성과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10년간 반도체(DS)부문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합의를 마쳤다. 사업 성과는 사실상 영업이익을 의미한다. 여기에 이미 지급해 오던 초과이익성과급(OPI·영업이익의 약 1.5% 규모)까지 고려해 노사는 연간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인 300조원 가운데 약 36조 원이 성과급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DS부문 메모리사업부의 연봉 1억 원 직원은 1인당 약 6억9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10년간 매년 영업이익

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삼성전자 역시 유사한 영업익의 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 같은 영업익의 연동 보상 체계가 한국 산업계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 전망도 제기된다. 2001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성과에 따라 연봉의 'N%'를 성과급으로 얹어 주는 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주요 대기업들의 보상 체계 전환에 영향을 준 바 있다.

문제는 영업익의 연동 보상 체계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높은 보상을 자랑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익만이 아니라 매출과 개인 성과, 조직 평가 등을 종합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AI 초호황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 격차가 커지며 대기업 안에서도 임금 차이가

커질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올 1분기(1~3월)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금융사 제외)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다. 성과급 재원 약 10%로 단순 계산 시, 국내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7.7%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받아 가게 되는 셈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AI 발 반도체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달리 대부분 기업들은 무리한 보상 체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성과급은 동기 부여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면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어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형기 기자 beepark@donga.com

▶A3면에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시행前 원청은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없다"

대법, 현대중 소송 노조 패소 확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에 있었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 회사가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정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7년 6개월 만이다.

정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에서도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까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조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며 "HD현대중공업은 하청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을 사용자로 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교섭에 나서라"는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법 개정 이전에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해미 1am@donga.com·여근호 기자

▶A2면에 관련기사



"6월 3일 한 표를"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0시부터 시작했다. 각 당과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차량과 확장장치 등을 활용한 유세 활동을 할 수 있다. 왼쪽 사진부터 서울시장 선거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부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박형기 oneshot@donga.com·이훈규 / 부산=장승윤 기자 ▶A4·5면에 관련기사

알립니다

제40회 인촌상 후보자 추천 31일 마감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는 2026년도 제40회 인촌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인촌상은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고려 중앙학원과 경성방직을 세운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만든 상입니다. 각 분야의 훌륭한 분들을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부문:** 교육, 언론·문화, 인문·사회, 과학·기술
- **대상:** 부문별 1억 원의 상금 및 상장과 메달
- **추천 기간:** 5월 31일(일요일)까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인촌기념회 홈페이지(www.inchonmemorial.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촌기념회·동아일보사

李 "GTX역 철근 누락 사태 파악-안전 점검하라"

국토-행안부에 지시, 국힘 "선거개입" 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실태 파악 및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현역 의원 9명이 참여하는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최보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전형적인 관련 선거"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왕 관련 선거를 시작했으니 이제 정원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직접 나와 토론하자"고 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A6면에 관련기사

중외교담당 고위인사 평양행 정부 "시진핑 방북 준비 주시"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이달 말 방북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방북이 공식화 되면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청와대는 21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방당국은 중국공산당의 대외연락부 고위 인사 등이 방북한 동향 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시 주석의 첫 방북 때도 '당 대당' 외교를 총괄하는 대외연락부가 경호와 의전 등을 포함한 실무 준비를 주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 시 북-중-러 연대가 가속화될 것이라 관측과 함께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방한하는 시 주석이 북-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A8면에 관련기사

MG 새마을금고

63년 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MG새마을금고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63년 지기 당신의 든든한 이웃

NEW MG